

현대 중국정치를 읽는 한국식 독해의 시작점

장윤미 지음, 『당치국가 중국: 시진핑 시대 통치구조와 정치의 변화』(서강대학교 출판부, 2023)를 읽고

이흥규 동서대학교 캠퍼스아시아학과 교수, 중국연구센터 소장

I. 논리로 중국정치를 설명할 수 있을까?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사회과학 연구자로 늘 생각하는 고민이다. 더군다나 코끼리로 비유될 정도로 거대한 그러나 곡절 많은 역사를 쌓아온 당대 중국의 복잡한 현실과 쟁점을 한국 사회에 제대로 알리고 그 정확한 의미를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중국 연구자로서 늘 갖게 되는 고민이다. 그래서 나는 당대 중국 문제들을 강의해야 하는 학교 수업이나 시민강좌 등을 맡으면 대중적이고 수려한 글솜씨로 당대 중국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 서적들을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최대한 당대 중국 사회의 사진 이미지를 활용하거나 장이머우(張藝謀)의 ‘인생(活着)’이나 ‘귀주이야기(秋菊打官司)’ 같은 영화를 보여 주며 당대 중국의 현실과 쟁점을 설명하려고 애쓴다. 사진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가 강의를 듣는 분들이 시각과 청각 등 다양한 감각을 통해 당대 중국을 포착하는 데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콘텐츠들은 중국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쟁점과 관련된 시대적 맥락(context)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대 중국정치 문제를 설명하여야 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이 깊어진다. 당대 중국정치의 중심은 아무래도 권력의 핵심인 중국공산당과 정치 엘리트들에게 있으나 그 권력 내부 모습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블랙박스 속에 있는 듯,

이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물론 당대 중국정치 구조와 작동 메커니즘을 규명한 책들은 적지 않지만 실제 중국정치의 내부를 속 시원히 드러내 주지는 못한다.

한편으로 대중적이고 수려한 글 솜씨로 당대 중국정치의 뒷이야기를 풀어놓는 글들도 있다. 최고 권력층 주변에 있으면서 그들을 관찰하며 겪었던 경험담 등을 풀어놓은 글들이다. 요새 들어서는 유튜브(youtube) 등의 영상 자료 형태로 중국공산당 최고권력층 내부의 동태를 해부하는 자료도 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자료들의 상당수가 대개 대중성은 있지만 신뢰성을 높게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많다. 편파적인 것으로 의심을 받거나 심지어 음모론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물론 중국공산당의 최고권력층의 일원이었다가 물러난 인물 스스로가 회고록을 통하여 특정 시기 중국공산당의 정책 결정과정이나 내부의 동향을 신랄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이런 경우는 비교적 희소하다. 당대 중국정치의 현실과 쟁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독자들에게 새로운 함의(implication)를 제시하는 텍스트가 필요한데 이를 포착하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당대 중국정치의 현실과 쟁점을 예리하게 다루어야 하는 학술논문이나 전문서적을 쓸 때는 고민이 깊어진다. 학술논문이나 저서라는 텍스트의 특성상, 당대 중국정치의 현실을 다양한 개념화로 규정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중국정치의 현실과 쟁점을 서술하고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이나 전문서적의 형태로 글을 쓸 때는 당대 중국정치의 현실과 쟁점을 잘 담을 수 있는 ‘개념(concept)’들을 잘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예를 들면 현대 중국정치 연구에서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을 상기해보자. 중국정치 연구에서 ‘시민사회’ 개념을 사용한다면, 이는 다양한 논쟁을 일으키기 쉽다. ‘시민사회’라는 개념 자체의 문제에서 사상가나 학자들의 정의(定意)가 복잡다기하여 많은 논쟁이 있어 왔다. 그러므로 중국의 ‘시민사회’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잘 구축하지 않으면 심지어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 설사 이러한 개념화에 성공했다 해도 연역적으로 개념화한 ‘시민사회’의 중국 존재 여부를 치밀하게 논증해야 하는데 그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논증 과정은 사실 당대 중국이 여전히 사회주의인지 아니

면 자본주의인지 해명해야 하는 문제 등 훨씬 더 복잡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본래 과거 탈냉전 이전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마르크스주의 혹은 그 아류의 이데올로기를 자신들의 국가정체성으로 제시하면서 ‘국가 대 시민사회’라는 논쟁틀 자체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나 거론될 문제로 치부해 왔다. 자본주의를 극복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보임직한 시민사회의 양상이 나타날 리 없다는 도그마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와 항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시민사회가 존재하고 성장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1989년 중국의 천안문 민주화 운동도 중국 사회주의 체제 역시 그 내재적 모순의 핵심 하나가 국가권력과 시민사회 사이의 균열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 정치사회의 위기를 자본주의의 승리로 도식화하고 서구 지향적인 시민사회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려는 또 다른 편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근대 사회로의 진입은 이미 청(淸)조 말기부터 나타났고 중화민국(中華民國) 건국 이후 본격화되어 5·4운동과 같은 근대적 민족주의와 민주주의 운동도 나타났던바, 중국에서 시민사회의 등장은 오래전부터 발견될 수도 있는 양상이다. 더욱이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에도 1956~1957년의 ‘백화제방(百花齊放),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쌍백(雙百)운동이나 1966~1976년의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기간의 여러 인민문혁(人民文革) 운동, 그리고 1976년 4·5운동과 1978~1979년의 ‘민주의 벽’ 운동 등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 역사는 계속 발견될 수 있다.

따라서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사회주의 체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비(非)역사적인 개념임을 증명해야 하고, 당대 중국정치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보여 주어야 하며, 오늘날 중국 사회의 여러 이슈들이 중국 시민사회의 성장 혹은 억제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보여 주어야 한다. 중국정치 연구자로서 꼭 해 보고 싶은 작업이지만,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대 중국정치의 여러 양상과 쟁점들을 시민사회의 개념과 관련된 논리로 글을 전개하려면 먼저 개념화하고 논증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많아질 것

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구의 역사경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개념들을 앞세워 논리로 중국정치를 잘 설명하여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중국 역시 근대화, 서구화의 길을 걸어왔지만 중국의 시스템과 동학의 여러 양상을 보면 서구의 시각과 개념으로 해석되지 않는 요인들이 여전히 많은 듯하다. 더욱이 중국 정치체제의 내밀한 동학은 여전히 알쏭달쏭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중국정치 연구는 다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II. 현대 중국정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장윤미 선생님의 『당치국가 중국: 시진핑 시대 통치구조와 정치의 변화』를 읽다가 갑자기 무릎을 쳤다. 장윤미 선생님이 중국 학자들을 인터뷰하다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었다.

… 베이징으로 현지 조사를 갔다. 짧은 일정의 현지 조사에서 접촉했던 학자들과 지인들의 발언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정치학자를 만나 헌법 수정과 시진핑의 권력 집중, 그리고 최근의 당 통제 강화에 대한 그의 생각을 물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이러한 전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것이다(这种转变对我们很熟悉的)’였다.

이 대목에서 나는 크게 공감했다. 중국 유학 시절의 에피소드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중국에 막 유학을 갔을 즈음이다. 박사 지도교수였던 중국사회과학원 바이깡(白鋼) 교수께서 과제를 내주었다. 책 한 권을 읽어 보고 중국정치의 상황에 비추어 평가해 보라는 것이었는데 그 책이 미국의 중국정치 연구의 거장 케네스 리버살(Kenneth Lieberthal) 교수의 *Governing China: From Revolution Through Reform*였다. 중국공산당의 창당 이후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러한 중국공산당 체제의 구조와 특징들을 설명한 리버살의 책은 가히 중국정치의 핵심인 중국공산당을 가장 심도 깊게 이해하려는 책으로 평가될 만했다. 중국공산당을

역사적 흐름에 따라 분석하는 통시적 접근을 하는 동시에 당시 시점의 당 체제와 시스템을 낱낱이 해부하려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블랙박스 속에 있는 듯 보였던 난해한 중국정치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민했던 사람들에게 이 책은 매우 탁월한 분석틀을 제공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지도교수께서는 의견이 조금 달랐다. 리버살 교수의 분석이 기존의 서구 학자들에 비해서는 좀 더 중국공산당 내부의 제도적 맥락을 잘 분석한 것은 맞지만 여전히 서구인의 시각으로 중국정치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중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평가를 ‘분절된 권위주의(fragmented authoritarianism)’로 해석하는 리버살의 관점 역시 정치체제를 민주주의-권위주의-전체주의 틀로 나누어 보는 전형적인 서구 자유주의 정치학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 정치학의 시각은 무엇일까? 석사 과정까지 한국에서 서구의 정치학 문헌들에 기대어 공부한 나는 지도교수께 질문을 더 하고 싶었고 반론도 하고 싶었으나 당시 서툰 중국어로 짧은 지식에 기대어 질문과 반론을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 같아서 자제하기로 했다.

대신, 나는 대신 어차피 중국에서 현대 중국정치 연구를 위한 박사과정을 밟기로 한 이상, 중국 내부의 시각은 무엇인지 천천히 살펴보고 연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지도교수는 가끔 나를 불러 중국의 정치 비사(秘史) 같은 것을 들려주었는데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다시 떠올랐고 이제껏 듣지 못한 이야기들도 있어 종종 귀를 세우고 경청하곤 했다.

예를 들면, 1989년 천안문 사건 당시 정치국 상무위원도 아니었던 장쩌민(江澤民)이 어떻게 자오쯔양(趙紫陽) 대신 중국공산당의 총서기로 발탁되고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여 최고 권력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지도교수의 설명은 명확하고 간단했다. 당시 장쩌민의 발탁은 과거 마오쩌둥(毛澤東)에 버금가는 사실상 황제(皇帝)와 같은 1인 최고 권력자였던 덩샤오핑(鄧小平)의 지명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장쩌민은 어떻게 덩샤오핑과 다른 원로들의 견제 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세력을 키웠나?

여기에는 상황 요인으로 인한 덩샤오핑의 결심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설명이었다. 과거 중국공산당의 1세대 최고 권력자로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는 지위를 누렸던 마오쩌둥이 생전에 자신의 후계자로 내세웠던 류사오치(劉少奇), 린바

오(林彪) 등을 자기 손으로 제거를 했고 덩샤오핑 역시 자신이 후계자로 내세웠던 후야오방(胡耀邦), 자오쯔양을 낙마시켰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중국 인민들이 중국공산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고 1976년 인민들이 문화대혁명 말기 마오쩌둥을 황제 권력으로 비판하며 저항했던 것처럼 덩샤오핑에 대해서도 이러한 우려가 존재했는데, 일찍부터 이러한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었던 덩샤오핑의 경우 더 이상 황제의 정치 문화를 연장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확고한 결심이 존재했다는 설명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오랫동안 중국의 정치제도사를 연구하고 특히 중국 황제체제 연구로 중국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온 지도 교수의 인식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중국 내에서 중국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듣고 있으면 그동안 한국에서 배운 서구의 중국정치 연구방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도 한계가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중국에 대한 서구 학계의 기존 연구는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 연구나 개발도상국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을 기계적으로 중국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 중국 사회주의를 전체주의 틀로 보았던 사례나 개혁개방 이후 중국을 권위주의 틀로 보는 견해들도 모두 이러한 영향을 받았음도 사실이다. 전체주의 틀로 중국 사회주의를 보면, 서구 학계에서 보편화된 정치변동이나 정치발전의 개념조차 도입하기 어려우며 권위주의 틀로 중국 사회주의를 보면 체제의 존속성을 당연시함으로써 그 이면에 담긴 중국 정치문화에서 비롯되는 동태적 요인을 간과하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정치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우선, 현대 중국정치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부에서 통용되고 있는 실재로서의 중국정치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 내부로부터 분석하는 시각을 방법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중국 사회의 신발을 신고, 중국인의 안경을 쓰고 중국을 인식하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국이 서구 국가들과는 다른 이념과 정치문화의 바탕 위에서 있음을 인정하고 중국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중국이 이룬 성과도 중국 내에서 형성된 담론에 비추어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이는 중국 당국에 의해 도그마적으로 설정된 이념과 구호에 천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중국 연구자가 견지해야 할 태도는 그 정반

대여야 한다, 중국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집하여 중국 내부의 담론 지형을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모델(中國模式) 담론을 생각해 보자. 중국모델 담론이 처음 형성되던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중국모델 담론은 기존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서 수용했던 신자유주의적 시장화를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제도혁신의 가능성을 묻는 논의들이었다. 자유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들 그리고 신좌파는 물론 마오쩌둥주의자들 그리고 신유가 지식인들까지 중국 내 다양한 논자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중국모델을 제시했고 그러한 각축 속에서 나타난 정책과 제도들은 당시 중국의 미래 방향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시진핑(習近平) 집권 이후 중국모델 담론은 점차 중국공산당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통치 이데올로기 구성 담론의 하나로 전락되었을 뿐, 이제 당대 중국의 다양한 논의를 포괄하는 유의미한 담론의 성격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중국이 이룬 성과 즉 정책이나 제도의 의미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의 중국연구 가운데 중국 당국의 도그마와 선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흐름도 포착이 되고 마치 이러한 태도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것인 양 주장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물론 중국 내부로부터의 시각의 정립은 중국 내부의 자료 그 자체에 대한 성실한 이해에서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 내부로부터의 시각이란 단순히 중국 당국이 생산하는 관방의 문헌 자료를 추종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자료의 선택은 결국 연구자의 관점을 궁극적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쟁점과 관련하여 중국 내부의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보아야 하며 특히 관방 자료와 중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입장을 담은 문헌들 그리고 반체제 자료를 골고루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민주화 관련 쟁점을 연구할 때는 중국의 민주화와 관련하여 중국 공산당의 관방 자료들도 참고해야 하지만 중국 지식인들의 다양한 사상과 입장을 특히 중국 내 반체제 인사들의 비판적 견해도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 이렇게 쟁점에 관한 중국 내 다양한 자료원을 수집하여 구성해야만 중국 내에서의 실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효과를 가진다.

그다음 중국정치 연구에서 필요한 것은 비판적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비판적이란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태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비판적이란 분석적이고 추론적이며 대안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중국 내 다양한 자료원을 통해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나름의 경험적·논리적 근거에 입각하여 분석하여 추론을 세우되 대안적 전망이 가능한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적 해석은 창의적 사고력에 입각하여 새로운 대안적 해석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III. 새로운 중국정치 연구의 모범을 보여 준 장윤미의 『당치국가 중국』

상술한 기준에서 보면, 나는 장윤미 선생님의 『당치국가 중국: 시진핑 시대 통치구조와 정치의 변화』(이하 『당치국가 중국』)가 중국 내부로부터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비판적 해석을 더하여 새로운 중국정치 연구의 모범을 보여 준 창의적 연구서라고 생각한다.

일단 이 책은 시진핑 집권 이후 당의 통제력 강화 양상에 주목하되 이러한 전변(轉變)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중국 내부의 반응을 포착하여 ‘당치(黨治)국가’라는 이 책의 제목이자 주제를 도출했다. 장윤미 선생님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진핑 집권 이후 이뤄진 당의 전면영도 강화, 헌법 개정을 통한 당의 통치 공식화, 당 통치의 제도적 완성으로서 당·국가기구 개편, 당 중앙의 감독으로 감찰 체제 일원화 등의 제도적 변화를 자세히 논증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장윤미 선생님도 지적한 것처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사회주의 사상’(이하 시진핑 사상)은 이데올로기 차원을 뛰어넘어 국가 전체를 지도하는 당의 새로운 통치이념이 된다. 그래서 당의 통치이념으로서의 시진핑 사상이 당의 ‘혁명 사상’이었던 마오쩌둥 사상이나 ‘개혁 이론’이었던 덩샤오핑 이론과 다르게 체제를 유지, 수호하는 보수적인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장윤미 선생님의 해석도 흥미롭다.

장윤미 선생님의 『당치국가 중국』에서 흥미로운 해석은 또 있다. 정치행정합 일체제인 중국의 당치국가 체제에서 정치와 행정 사이의 유기적 구조를 자세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 책은 당이 ‘영도지위’와 ‘집정지위’가 있음을 밝히고 당은

표 1 당의 두 개의 지위와 당정관계

당		정
지위	영도지위	집정지위
근거	당장	헌법
원칙	엄격한 당의 관리	법에 의한 통치와 국정운영
수단	영도력, 정치운동	국가통치시스템의 현대화
분야	정치	행정
조직	당위원회	전인대, 국무원, 사법기관, 군대
기능	영도(leadership)	통치(governing)
권한	정책결정권	정책집행권

영도기구로서 정치의 주체인 동시에 통치를 위한 행정의 최고 책임기구가 되는 것임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장윤미 선생님이 제시한 표를 통합한다면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될 것이다.

장윤미 선생님의 지적처럼, 이는 마치 황제의 전제권력(arbitrary power)과 관료의 일상권력(routine power)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던 고대 황제체제를 연상시킨다. 황제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관료는 황제를 대리하여 통치하는 체제인데, 이는 황제가 천자(天子)로서 정치적 권위의 정통성을 갖고 있었고 관료체제는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했기에 가능했던 것임을 시사한다. 장윤미 선생님은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정치권력은 황제에서 공산당으로 바뀌었을 뿐 일원적 전제권력이 최고 위치를 차지하고 통치의 영역에서는 관료체제가 국정 운영의 조직적 기반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제체제 하의 정치권력과 관료체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온 것을 오랫동안 경험해 온 중국인으로서의 당내 구조가 1인으로 권력 집중으로 전변(轉變)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며 역시 견딜만한 것이 된다. 그것은 마치 황제체제에서 관료의 힘이 강하던 시기에서 황제 권력이 강화되는 시기로 변화되던 경우를 연상시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관료 권력에 대한 탈권(脫權)을 시도하여 마오쩌둥 1인 권력을 강화했던 문화대혁명의 역사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중국 인민들은 언제 전제권력에 저항하게 되는 걸까?

황제가 인민들의 저항을 받아 왕조가 교체되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의 근거가

황제의 부덕(不德)으로 민심을 잃게 되는 상황인바, 중국공산당이 부패하여 민생을 돌보지 않고 덕치(德治)를 실행하지 못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반부패투쟁’을 통해 당의 위기를 극복하고 당의 권위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반부패투쟁을 아예 당내 규범으로 제도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의미에서 뛰어난 능력과 덕성을 겸비한 지도자를 선발한다는 현능주의(meritocracy)가 오늘날 중국에서도 표면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의 반부패 투쟁은 항상 최고지도자가 정적(政敵)을 숙청하여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고 장윤미 선생님도 예리하게 지적했듯이 본래 부패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졌다는 현능주의는 시진핑 집권기에 이르러 최고지도자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는 다만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인민이 견딜 수 있는 금도(襟度)를 넘게 되면 현대판 역성혁명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장윤미 선생님의 해석처럼 중국 내부정치의 논리에서 보면 중국공산당의 정당성은 인민으로부터 비롯되었고 인민의 이름으로만 존재할 수 있기에, 고대 황제체제가 그러했듯이 현대 중국공산당 체제 역시 인민의 조반(造反)을 만나면 그 미래가 예측 불가능한 것이 된다. 문화대혁명이나 천안문 민주화 운동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국공산당은 자신의 ‘사회주의’ 완수를 위해 ‘인민’을 동원해 온 반면, 동원된 인민은 ‘민주’의 원리로 평등한 ‘사회주의’를 꿈꾸고 그 실현을 위해 ‘운동’의 동력이 되어왔다는 장윤미 선생님의 지적은 본래 중국공산당과 인민의 관계를 적확하게 보여 준다. 물론 장윤미 선생님은 오늘날 중국공산당이 다시 새롭게 제시한 ‘중국식 민주’의 ‘인민민주’ 논리가 ‘인민이 없는 인민지상주의’라는 예리한 비판을 덧붙인다. 즉 인민 편에 서지 않은 당치(黨治)를 내파(內破)할 수 있는 민주적 원리가 부재하다는 비판이다.

오히려 시진핑 시대의 ‘인민’ 개념은 인민과 중화민족, 국가로 이어지는 새로운 가국관(家國觀)을 주입하여 ‘민족으로서의 인민’ 개념을 대두시켰다는 것이 장윤미 선생님의 지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탈(脫)혈연의 국제주의적 사회주의 인간형으로서 ‘인민’ 개념이 이미 사라진 시진핑 시대의 중국에서 ‘인민전쟁’을 통해 ‘탈정치화된 정치’를 ‘재정치화’할 수 있다는 왕후이(汪暉)의 주장은 난센

스로 느껴진다.

장윤미 선생님은 시진핑 시대의 사회거버넌스의 특징을 ‘당 조직 주도의 정치 동원’과 ‘국가-사회 간의 행정기능적 협력’의 상호결합이라고 규정하면서 기층 각 영역에서 당 조직을 건설하여 당의 정치통합 역할로 국가-사회 간의 협력형 거버넌스를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결국 사회단체도 당의 영도에 복속시키는 당치 체제 구축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결국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에 제시된 ‘중국식 현대화’와 ‘공동부유’의 구호는 중국공산당의 장기집권을 위한 비전이지만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장윤미 선생님은 그 이론적 난점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제시하고 그 한계들을 자세히 평가하고 있다. 장윤미 선생님의 『당치국가 중국』의 탁월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점이기도 하다. 즉, 저자가 중국 내부의 시각으로 비판적 분석을 진행하는 것을 넘어 현대 중국정치의 현실에 직접 개입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적 방안을 모색하려 했다는 점이다.

IV. 한국형 중국정치 연구 모색의 필요성

중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중국의 연구자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은 ‘그래도 중국 정치의 동학에 대해 너희 한국의 중국연구자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적 동학을 자유주의 정치체제에서 자라온 한국의 중국연구자들이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실 그 말은 한국인들이야말로 중국 정치체제에 내재한 유가적(儒家的) 문화와 작동 방식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었을 것이다.

기실, 한국의 중국정치 연구자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학위를 하거나 필드워크를 하는 등 유학 경험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어를 할 수 있어 중국 학자들은 물론 중국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교류해 왔다. 양적으로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수의 연구자를 갖게 된 만큼, 한국의 중국정치 연구는 질적

으로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된다.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한중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 다소 동어반복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측면도 있지만, 한국의 중국정치 연구는 이미 그 주제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다양하고 매우 분석적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한국의 중국정치 연구 가운데 중국 내부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비판적 해석을 전개하고 나아가 현대 중국정치 현실에 직접 개입하여 그 대안적 방안을 제시하려 한 시도는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야말로 중국에 대한 한국의 내재적 비판을 시도하되 창의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나아가 대안적 방안을 제시한 한국형 중국정치 연구가 아닐까? 장윤미 선생님의 『당치국가 중국』은 이러한 점에서 한국형 중국정치 연구의 시작점이 아닐까? 한국의 중국정치 연구는 장윤미 선생님의 『당치국가 중국』을 시작점으로 해서 한국형 중국정치 연구를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장윤미 선생님의 이 책에서 다소 모순적으로 처리된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결론 부분에서 시진핑 시대에 들어 통치구조가 당과 국가 간의 긴장을 유지해 왔던 이전의 ‘당-국가 체제’에서 이제 실질적인 당 통치가 작동하는 ‘당치국가’로 변화되었다고 규정하는 내용인데, 나는 ‘당치국가’ 개념을 시진핑 시대 이후의 협의적인 개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이는 장윤미 선생님이 본문에서 당치국가 체제를 황제체제의 지속으로 연상시켰던 기본 입장과는 모순적인 논리로 생각된다. 나는 당치국가 개념을 좀 더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과거 지도교수의 또 다른 설명도 떠올랐다. 중국이 1912년 신해혁명으로 아시아 최초의 근대적 공화국을 세웠지만 중국은 사실상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며 서구식 민주주의가 중국에 부합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기실, 중화민국 초대 총통이 된 것은 청(靑)나라의 신하였던 위안스카이(袁世凱)였으며 국정의 혼란을 이유로 위안스카이는 다시 제정(帝政)으로의 복귀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의 뒤를 이은 군벌들의 각축을 보면 여전히 자신의 지역을 배경으로 세력을 키워 새로운 왕조를 건설하려 했던 중국의 역사가 겹쳐져 보인

다. 신해혁명의 사상적 지주였던 쑨원(孫文) 역시 중국의 혼란을 두려워해 국민당 일당 체제인 ‘훈정(訓政)’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장제스(蔣介石)가 이끄는 국민당 정부는 실제 북벌 통일 이후 훈정 시기로 진입했음을 공식화하게 된다. 이는 청나라의 황제체제나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이건 일원적 전제권력과 관료통치의 일상권력이라는 유기적 구조는 지속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중국공산당의 당치국가 체제는 중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 황제체제의 속성을 이어받아 중화민국 이래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까지 이제껏 지속되어 온 체제이며 따라서 중국인에게 매우 익숙한 체제가 된다.

장윤미 선생님도 본문에서 시사한 바 있었지만 그래서 나는 이러한 ‘당치국가’는 이른바 ‘법치국가’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생각된다. 법치국가란 법이 다스린다(rule of law)는 의미로 모든 국민은 물론 국가의 최고지도자도 따라야 한다. 이를테면 군주도 일률적으로 법률(rule)을 따라야 하는 입헌군주제도 이에 포함된다. 하지만 중국의 황제체제 즉 전제군주제는 이와 다른 것이다. 전제군주제에도 법은 있지만 전제군주는 법 위에 있다. 개명된 전제군주제라면 법으로 인민을 다스리는 것이다.

현대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법치국가 즉 ‘의법치국(依法治國)’을 내세우지만 중국의 법치는 ‘법이 다스린다(rule of law)’는 의미와는 다르다. 법치의 대상에서 중국공산당은 예외가 되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사실상 법 위에 있어 중국의 법치는 ‘법이 다스린다’가 아니라 중국공산당이 ‘법으로 다스린다(rule by law)’가 맞는 표현이 되는 것이다. 결국 ‘법치국가’ 개념과 대비되는 ‘당치국가’ 개념은 ‘당이 다스리되, 법으로 다스리는(rule of party, rule by law)’는 체제가 된다. 그래야 당치국가 개념이 중국의 면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된다.

그래서 시진핑 집권 이후 이루어진 시진핑 1인으로서의 권력 집중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다. 즉 당치국가 체제를 구성하는 당내 권력 구조가 기존의 집단영도체제에서 집중통일영도체제라는 시진핑 1인 중심 체제로 바뀌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는 ‘당치국가 내부의 변화’인 셈인데, 마치 황제 체제하의 전근대 중국에서 대신들의 권력이 커졌던 시기가 있었던 반면, 황제 1인의 권력 장악이 강화된 시기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느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장윤미 선생님의 ‘당치국가’ 개념은 ‘당주국

가(黨主國家)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당치국가’가 ‘법치국가’에 대비되듯이 ‘당주국가’는 ‘민주국가’에 대비되는 의미로 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의 제목을 『당치 국가 중국』이 아니라 『당의 나라 중국』으로 붙였으면 어땠을까?

그럼에도 장윤미 선생님의 『당치 국가 중국』은 한국형 중국정치 연구의 시작점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 연관된 새로운 연구로 확장되고 이후 더욱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면 황제체제, 국민당 집권시기의 중화민국, 공산당 집권기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체제 특징의 지속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당치국가 중국’의 본질적 속성을 좀 더 정교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련 공산당 집권기의 소련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일당제 사회주의가 성립된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제적 전통과 제도를 연구해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소련과는 다르게 붕괴하지 않았던 중국의 제도적, 문화적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장윤미 선생님의 후속적인 연구를 고대한다. 우리도 장윤미 선생님의 <당치 국가 중국>을 한국형 중국정치 연구의 시작점으로 삼아, 내재적 인식과 비판적 해석, 그리고 현실 개입의지를 가진 대안적 방안 제시라는 목표로 정진하여야 한다.

투고일: 2023년 12월 8일 |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9일